도道를 넘은 불법복사, 일반 단행본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정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산불방지와 단속을 위해 산림청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김세연 부장은 "출판물 역시 경찰이 불법복사 단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 단속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오래전부터 법제처에 문광부 직원에게도 사법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산림청, 정통부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사법권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복사전송권센터에서는 지난 2월 27일에 시행된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5조(문화관광부예규 제6호)에 의해 센터 직원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수거·폐기 협조요원증' 을 발급하여 관계 공무원과 더불어 이 행정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불법복사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MF 관리 체제 이전까진 일부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도서의 일부분이 필요할 때나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도서에 한하여 행해 오던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교재를 무차별적으로 불법복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서모 양(24세)은 "전공과목의 경우 주교재가 있지만 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다양한 부교재를 함께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

이 복사를 선호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복사를 하는 경우보다 아예 학과대표가 학생들로부터 불법복사도서를 단체주문 받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복사의 수요증가로 인해 대학가에 서점이 사라지는 반면 대학교 구내와 정·후문 주변상가에 위치한 복사점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서울의 대학 주변에서만 복사점이 403개소, 부산이 184개소, 경기지역이 190개소 등 전국에서는 1,642개소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많아 2,000개 업소 이상이 영업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일정액의 카드를 구입하면 아무런 통제 없이 학생들이 직접 복사를 할 수 있는 무인카드복사기의 설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부 대학 당국에서 구내 복사실을 경쟁입찰에 붙여 임대하는 과정에서 무인복사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인복사와 더불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영업형태는 인터넷상에서 등록 홍보 주문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불법복사본을 우송해 주는 경우다. 이들 업소는 서울지역 209개소, 부산지역 79개소를 비롯해 전국에 1,000여 개 업소가 불법 복사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 구내에서 복사점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지만 나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대학생들이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며 자신들의 의지보다 학생들이나 학원에서의 요구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불법복사에 대한 인식부족은 복사업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단속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공무원들도 크게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나도 했는데 가난한 학생들이 좀 하면 어떠냐', '생계유지형 범죄라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기가 곤란하다' 는 등 정서적인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지도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단속을 펼쳐도 단속기관에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복사업체들이 갈수록 기업화되면서 조직적이고 치밀한 불법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단속을 피해 쉽게 찾을 수 없는 가정집을 이용하거나 단속이 없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을지로, 성수동 등 인쇄골목에서 다른 출판물과 함께 복사를 하고 있다. 또한 복사업체를 적발했을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친고죄인 데다가 실질적인 사법권이 없어 오히려 복사업체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복사본 보유에 의한 피해액을 약 3,02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학생 1인당(210만 명) 연간 제책된 복사본 보유 권수를 8권으로 보고, 학술전문도서 1권당 평균정가를 약 1만8,000원(평균 400쪽 기준)으로 봤을 때 계산된 액수다. 여기에 부분복사로 인해 구매의욕 상실분까지 감안하고,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모든 기업체, 정부관련 부처, 도서관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피해액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손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위축, 그리고 지식생산과 확산의 통로가 막히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불법복사와 복제전송은 학술 등 일부 전문출판사 주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다. 복사 대상이 대부분 학술기술과학 서적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전자책이 확산되면서 일반 교양물이나 소설책 등도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14일 기사를 통해 "해리포터 시리즈 5편인《해리포터와 불사조의 기사들》이 지난 6월 출간된 이래 각종 불법복제판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리포터 시리즈의 경우 작가나 출판사 측에서 책을 전자책으로 발간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마니아층에서 책을 스케닝하거나 자국어로 번역해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드디어 사람들이 전자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책이 불법복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책은 영상이나 음반 등 다른 매체에 비해 용량이 작아 복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복사기로 인한 불법복사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제 일부 출판사가 아니라 모든 출판사들이 힘을 합쳐, 불법복사와 복제전송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

사진제공 한국복사전송권센터